

20분만에 결렬... 여야, 원구성 막판 협상도 실패

우원식 의장 주재 합의점 못찾아...민주 "25일 본회의서 처리" 국힘, 오늘 의총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결정할 듯

여야 원내대표들이 막판 원 구성을 위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회동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먼저 의장실을 빠져나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어떤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고, 박 찬대 원내대표도 어떤 타협안을 제시한 바 없다"며 "이제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박 원내대표) 만날 일은 없다"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우리 스스로 결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포기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 역시 원 구성 논의를 위한 추가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상당히 결연한 의지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는데 아쉬움을 표현했다"며 "현재는 (회동)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아주고 한 여당의 기존 제안 등을 두고 "충선 민심을 받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절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한 만큼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명단을 내면 25일 본회의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여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마저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11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이 제시했던 시한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만큼 우 의장의 결단도 주목된다. 우 의장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5일 본회의를 연다는 입장은 확고한가"라는 물음에 "변동 없다"고 답했다.

우 의장이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정한 23일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우 의장이 25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사실상 예고하고,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간 7개 상임위 수용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으나 최근 들어 '소수 여당 한계를 인정하고 상임위에 들어가서 싸우자'라는 현실론이 조금씩 힘을 얻으면서 24일 7개 상임위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이거나도 맡는 안, 법사·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 추가 협상안까지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모두 거부했다.

우 의장이 이번 주를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그 으면서 국민의힘은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시도당 위원장 출마자들 "당원 주권시대"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한 인사들이 잇따라 광역 시도당 위원장에 출마표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한데 이어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도 당원 비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외 인사들의 출마도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의 '당원 중심' 변화가 광역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들은 23일 국회에서 '광역시도당 위원장 후보 공동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끼리 합의 추대는 당원중심 대중정당과 맞지 않는 모습"이라며 "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다. 국민의 주권지와 주인의식은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중이고 우리 정치도 대개혁과 대혁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부터 국민의 주권지와 주인의식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혁신하고 개혁하겠다. 우리는 당원중심의 민주당을 위해서 시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의원 공모 제도화 ▲시도당에 민주연구원 분원 구축 ▲당원총회 일상화 ▲모바일 당원 투표 도입해 '당원 정책 제안 운동' 의무화 ▲지방선거서 당원이 공천권 행사 ▲전국의 250만 당원과 함께 당원주권선언 시작 등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 출마예정자와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예정자, 이영수 경북도당 위원장 출마예정자,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 출마예정자,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 출마예정자,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 출마예정자, 강위원 광주시당 위원장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의장선거 첫 TV 토론

MBC 25일 밤 11시...후보 자질·역량 등 검증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시의회 의장 선거를 위한 TV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25일 밤 11시 30분 광주MBC를 통해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보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자 방송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민들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들의 '광주시정 감시와 견제' '이'에 대한 자질과 능력 '광주시의 미래비전' 등을 검증하게 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정의 주요한 축인 의장의 권한이 막대한 만큼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하고 시민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토론회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보반기 의장 후보로 등록된 강수훈(서구1), 박미정(동구2), 박수기(광산구5), 신수정(북구3), 심철의(서구4) 의원 등 총 5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광주시당 이병훈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방송토론회를 광주시당에서 전

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이 의장 선출 이후에도 의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시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방송토론회를 모범적인 선례로 남기고, 구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시의회 의장후보자를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원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선거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김원이 의원, 민주당 당론 채택 법안 3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비롯,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다.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방 및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의대·한의대·치대 입학생 중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한 게 핵심내용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절차를 지원한다. 현재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본인 신청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자신이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신해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오광록 기자 kroh@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